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 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한전공대 개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장인과 주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낙연·정세균, 텃밭 설민심 성적표는... 대권 불씨 '살리기' vs '지피기'

이낙연, 현안 3법 처리 강한 의지 '작심 행보' 정세균, 코로나방역·민생·지역현안 챙기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심잡기 광복 행보를 하고 돌아간 가운데 두 '잠룡'의 여권 핵심 지지기반에서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초·중반대를 기록하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뒤지고 있는 이 대표는 텃밭에서의 대권 '불씨 살리기' 행보로, 5%대 이하로 지지율이 미미한 정 총리는 대권 '불씨 지피기' 행보로 각각 평가되고 있다.

15일 광주와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설연휴를 하루 앞둔 10일과 11일 이들 간 광주와 전남을, 정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를 나란히 방문해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1박2일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3가지 지역 관련 특별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동선이었다. 이 대표의 첫 방문지인 나주 한전공대 부지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 곳 중 하나로 그는 "내년 3월 한전공대 개교하려면 오는 3월까지 법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가급적이면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하고도 약속을 했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지역 원로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 여순사건 위령탑 참배 이후 가진 유족과의 대화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이달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3월9일까지 대표직을 맡는 이 대표는 임기내 지역 현안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역민에게 각인시키고 돌아갔다. 정 총리도 지난 10일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연료전지발전 사업 착공식, 광주 양동시장, 광주 서구 코로나 선별진료소,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광복행보를 하고 돌아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 사령관으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지역 민생까지 챙기는 '1석3조'의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총리의 코멘트는 예사롭지 않았다. 정 총리는 빛고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착수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광주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호남과 광주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제 호남과 광주도 충분히 누리고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정부도 정책과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형일자리 상징인 글로벌모터스 공장을 방문한 정 총리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자동차공장을 신설하게 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가며 성장해 나갈 위대한 여정에 광주 노·사·민·정이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광주 방문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그분께 정치를 배웠다. 그리고 광주의 아픔을 담고 일어난 포용력과 정의로움도 배웠다"고 적기도 했다. 두 잠룡의 여권 최대 지지기반 행보에 대한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설 직전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설 연휴 이후 여론조사는 아직 없는 터라 이 대표와 정 총리의 성적표가 주목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권 잠룡 2명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나란히 텃밭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권 주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면서 "대권 불씨 살리기에 지피기든 누가 더 웃을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與, '선별적' 4차 지원금 대폭 확대... "위로금 수준 안돼"

이낙연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 "2·3차 위로금 수준"...4차 지원금 규모 10조~15조 전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원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우선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피해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실업자가 41만명 늘어 심각한 고용위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고 공공일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최소화와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한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에 더해 일자리 예산까지 반영한 대규모 추경을 시사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갈

이 했다"며 "앞으로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대신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선별적 지급이 이뤄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었다. 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베풀고 있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10조원 이

상이 확실시되며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15조원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금은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는 신속하고도 강력한 지원"이라며 "시기도 앞당겨야 하고 규모도 2·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5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와 연매출 8억원 이하 사업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넓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당국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줌으로써 '두터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보고 내용과 관련해 "과거에는 매출액 기준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예측을 못하고 창업했다가 바로 폐업한 분들은 매출이 안 잡혀서 지원을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출 기준 상향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당에서는)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했는데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수준으로는 안되니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자는 이야기, 지원 폭과 규모 및 대상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정의당, 김종철 빈자리 채운다... "이달 말 보궐선거 날짜 결정"

김종철 전 대표의 성수행 사건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이 빠른 시일 내 대표 보궐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 대표 보궐선거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선거가 당 쇄신방안을 둘러싼 정당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정의당 비대위는 향후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쳐 2월 하순 전국 위원회에서 당대표 보궐선거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